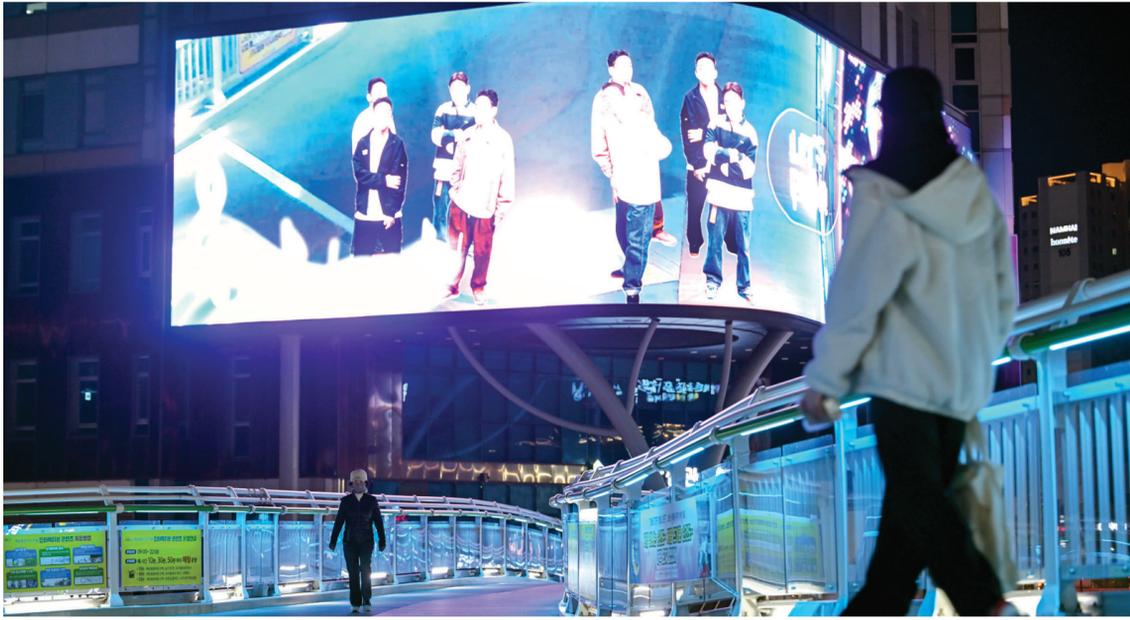


## 빛공해에 잠 못드는 빛고을의 밤



시민들이 16일 밤 조명이 환하게 켜진 광주시 남구 미디어월 아래 백운브릿지를 걷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도심 곳곳에 설치된 광고와 장식 조명이 밤 기온을 크게 초과하는 등 빛공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의 수면 장애를 초래하고 동·식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디어파사드와 대형 스크린 등 심야 광자원이 고령화해야 한다는 절충안도 제기된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4년 광주시 제4차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결과 5648개 측정 지점 가운데 3807개 지점이 허용기준을 웃돌아 전체 초과율이 67.4%에 달했다.

이번 평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고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고 있다.

시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표준지 281곳(5648개 지점)을 지정해 빛공해 환경영향 측정·조사를 진행했다.

표준지에는 3차 빛공해 환경영향 평가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지점 212곳(75%)에 신규 개발행위 허가가 이뤄졌거나 용도지역 변경이 있었던 지역 59곳을 추가했다.

빛공해 민원 발생 지역, 옥외 체육시설, 생태보호지역, 공원, 지자체의 요구지, 미디어파사드 설치 지역이 포함됐다. 조사 유형은 공간조명(가로등·보안등·공원등·옥외조명 등), 광고조명, 장식조명(미디어파사드 등)이다.

평가결과 640개 공간조명 중 38%(246개),

### 광주 도심 광고판·장식 조명

#### 밝기 기준치 크게 초과

#### 첨단·수원지구 초과율 높아

#### 수면의 질·생태계 악영향 우려

4916개의 광고조명 중 71%(3479개), 88개 장식조명 중 89%(78개)가 빛 방사허용기준을 초과했다. 공간조명 중 기준 초과는 보안등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총 568개 보안등의 40.0%인 227개가 빛방사허용기준을 넘어섰다.

가로등은 33개 중 13개가 기준을 초과해 초과율 39.4%를 보였으며, 공원등은 6개 중 4개가 기준을 초과했다. 옥외조명 24개 중 2개만이 초과했다.

광고조명 측정 기준치를 초과한 조명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채널레터형(글자 마다 등이 켜지는 조명)으로 2307곳 중 1689곳이 초과했다.

행정구역별 분석 결과 광산구가 2083곳 중 68.5%(1426곳)로 초과율이 가장 높았다. 첨단지구와 수원지구 내 상권 지역의 조명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행히 빛공해 민원 발생은 감소세이다. 2021년 426건 달하던 빛공해 민원이 2022년 311건으로 줄었고 2023년 266건으로 감소했다.

2023년 빛공해 민원은 주로 공간조명에 대한 수면 방해 및 생활 불편과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특

히 자치구 중 가장 면적이 넓은 광산구(156건)에서 공간조명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광산구의 대부분 자연녹지지역(11종)으로 지정돼 있어 농작물 피해와 관련된 민원이 대부분이었다.

노후 건축물(30년 이상) 연면적 비율이 29%대로 가장 높은 동구의 경우 도로의 폭이 좁고 건물 밀집돼 있어 보안등으로부터 방사된 침입광에 의한 빛공해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적인 공간조명의 초과율은 전년도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초과한 지점의 경우 빛방사허용기준의 약 3.1배에 달하는 수치를 보여 공간조명에 인접한 주거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조명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았던 서구의 경우 자치구 중 가장 면적이 작지만, 광주시의 주요 거주 및 상권 지역으로 옥외광고물이 2번째로 가장 많은 지역이고 광고조명의 초과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평가에서 실제 광주교·사직공원·광주시 미디어아트플랫폼·금남공원·광주 톨게이트를 조사한 결과 금남공원만 제외하고 나머지 4곳은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빛공해는 수면에 문제를 일으켜 인체에 호르몬 문제를 일으키고 생태계 동·식물 번식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면서 "미디어파사드 등에 관한 빛공해의 경우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한 절충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만장일치로 인용...본안 선고때까지 임명 중단

헌법재판소(헌재)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의 헌재 재판관 후보 지명 효력을 정지했다.

헌재는 이날 한 대행에 대한 '헌재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장 합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재 재판관으로 지명하지 8일만이다. 이들 헌재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가운데 2명이다.

헌재가 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한 대행이 지명한 2명의 재판관 임명은 본안 선고시까지 중단된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의 본안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 전에 후보자들이 재판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가처분 인용의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한 대행의 임명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중

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봤다.

헌재는 "한 대행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면 헌재가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를 다투거나 후보자가 헌법 재판의 심리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면서 "후보자가 관여해 (헌재에서) 중구 결정이 선고되는 경우 재심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임명 행위로 인해 헌법 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면서 "가처분이 기각됐을 경우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는 지난 9일 한 대행의 헌재 재판관 지명 효력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접수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추경, 광주에 '짚뚱' 반영

AX실증밸리 예산 670억 신청에 겨우 25억 배정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12조원으로 늘렸지만, 광주시 현안인 AX실증밸리사업 예산은 25억원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 서구 갑)의원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광주 AI 예산 670억원을 기획재정부(기재부)에 올렸지만, 이중 25억원만 반영됐다.

정부는 산불피해 복구(3조원 이상)와 AI 경쟁력 강화(4조원 이상), 통상·민생 안정(4조원 이상)을 위한 '필수 추경'을 총 12조 원 규모로 편성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광주의 AX실증밸리 사업 예산 대부분을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부는 광주시가 요청한 670억원의 국비 예산을 추경안에 포함했으나, 기재부가 "지역사업"이라는 이유로 25억원만을 반영한 것이다.

또 과기부가 AI 인프라인 GPU(그래픽처리장치)를 확보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상황에서 광

주를 별도 지원하는 예산 중복집행 문제가 있다는 점도 꼽았다.

이는 광주시의 AI데이터센터 운영을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려는 논리다.

결국, 광주 AI데이터센터는 국내 최고 수준의 컴퓨팅 연산 능력 88.5 PF(페타플롭스)를 갖추고도 정부지원이 축소돼 50%(44.3PF) 수준밖에 가동할 수 없게 된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예산 담당자들은 정부에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최태호 인공지능산업실장은 "광주 AI데이터센터의 운영과 AX실증밸리 조성은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AI사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오는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 "AI데이터센터는 정부가 구축한 스타트업 및 연구자 지원용 인프라이기 때문에 정부의 전폭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민간임대주택 계약 피해자들 어찌나 ▶6면

KIA 변우혁 "홀런보다 팀 승리가 우선" ▶18면

팔도 핫플레이스 -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22면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기업의 지속성장 | 국토의 균형발전

# 지금이 기회! 기회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인센티브

세제지원	소득세·법인세	• 수도권 기업이 사업용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 시 양도차익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 • 창업기업 및 신설 사업장 소득·법인세 감면(5년 100% + 2년 50% 감면)
	취득세·재산세	• 특구 이전시(최대 100%) · 창업시(최대 100%) · 공장 신·증설시(최대 75%) 취득·재산세 감면
재정금융지원	상속세	• 이전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업종변경 제한, 상속인의 대표이사 중사 의무 폐지) • 창업·이전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중견기업 전체) 및 공제한도 폐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국회통과시 적용
	이자·배당소득세	• 민간이 펀드에 일정기간(10년) 이상 투자시 이자 · 배당소득 세제혜택(분리과세 9%)
규제특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확대(지원비율 최대10% 가산)
	개발부담금	• 개발부담금 100% 면제
정주여건개선	규제특례	• 지방정부가 규제특례 직접 설계하여 신청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후 해당규제 특례 부여
	주택 양도세	• 특구에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주택 특별공급	• 특구 내 기업 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공급
교육지원	•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대상 선정시 가산점 부여	

\* 개발부담금 감면, 규제특례, 주택특별공급 등의 경우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 국회 통과시 적용

